

# 中國의 東北工程과 高句麗史 歪曲

李 成 制  
(한신대 연구교수)

1. 머 리 말
2. 中國의 高句麗史 研究와 새로운 歷史像
3. 新中華主義와 高句麗史
4. 맺 음 말—高句麗와 中原王朝間의 관계

## 1. 머 리 말

종래 우리가 高句麗를 연상할 때면 떠오르는 단어는 尙武的 기상이라든가 침략해온 隋나라 군에 맞서 거둔 통쾌한 승리 등이었지만, 정작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그 동안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왔다. 고구려는 그저 자랑스러운 고대 한국사의 한 부분쯤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高句麗史'에 우리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던 시기는 왕조의 붕괴 이후 단 한번도 없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가 전해지자 관련 전공학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시선이 고구려로 모아졌던 것이다.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까지 나서서 중국의 역사왜곡을 질타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려왔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보였던 반응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제기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특히 중국의 역사왜곡이 ‘東北工程’이라는 대규모 연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高句麗研究財團’이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하지만 ‘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을 알리는 보도를 뒤로 하고 우리의 관심은 급속히 다른 이슈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던 고구려 문제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고구려사를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논의한다”고 했던 양국간의 협의와는 별도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고구려 문제에 대해 새삼 우리의 주의가 모아진 바 있었다. 이에 작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이 처음 전해졌을 무렵으로부터 최근까지 사태의 전개과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정부와 무관하며, 東北 3省 지방정부와 학계 차원의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말과는 달리 고구려사 왜곡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역사왜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이 불러올 파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대응방안들이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면 한다.<sup>1)</sup>

1) 알다시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글은 여러 편이 나온 바 있었다. 이미 단행본의 형태로까지 발간되고 있는 형편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될 것도 별로 없어,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꽤나 망설였다.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섭렵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전달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이나 새로운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 역시, 필자의 얇은 지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황의 정리와 향후의 전망에 중점을 두어 달라

## 2. 中國의 高句麗史 研究와 새로운 歷史像

과거 고구려가 자리잡았던 영토는 크게 보아 현재 중국의 동북 3성(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과 북한의 전 영역 그리고 우리의 중부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북한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고구려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특히 중국의 영토 안에는 고구려의 수도 유적지(卒本國 國內城)가 두 곳이나 있는 등 유물과 유적 수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구체적인 생활의 흔적이 그 곳에도 있다는 점에서 -혈연적이고 역사적인 계승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논외로 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환영해마지 않아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를 '왜곡'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점부터 알아보아야 하겠다.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성과물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핵심은 다음에서 인용된 『光明日報』의 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우리(중국; 필자 주)는 고구려민족이 중국 동북 역사상의 1개 민족으로서 고구려정권이 중국 동북 역사사의 邊疆民族政權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민족의 선조는 중국 동북지구에서 활동하였다. 둘째, 고구려 발원지 및 都城은 모두 漢四郡 범위에 속하며, 중국에 끊이지 않고 稱臣, 朝貢하고 하사품을 받았다. 셋째, 漢나라에서 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왕조는 분열시기까지 포함하여 모두 고구려를

는 연구소측의 요구가 있어, 여기에 기대어 현안의 정리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삼고,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였다.

변강민족정권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고구려는 7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을 거치며 冊封, 조공, 納質을 하면서 臣屬 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밖에 있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에 대해서 亡國의 한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당나라의 통일대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섯째, 고구려 멸망 후 대다수가 漢族으로 융합되었고, 일부만이 半島民族이 되었다.

다음으로 王氏 高麗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시간적으로 현격하며, 반도 중남부에서 新羅를 대신하여 일어난 정권이다. 또한 주민도 한반도 남부의 三韓 후예인 新羅人, 百濟人이 주축이었다. 王建은 고구려 후예가 아니라 樂浪郡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三韓-新羅와 百濟-高麗-朝鮮으로 이어졌으며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왕씨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본 것은 『五代史』, 『宋史』 등 중국 역사서에서 착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특히 『明史』에서는 李成桂를 朝鮮國王으로 봉하면서 箕子朝鮮-衛氏朝鮮-漢四郡-高句麗-高麗-朝鮮의 계승관계를 인정하여 기자조선-위씨조선-한사군-고구려로 이어지는 중국 역사를 한국사에 넣는 큰 착오를 범하였다. 결국 왕씨 고려와 조선은 고구려와 기자 조선을 ‘도용(冒名頂替)’한 정권이었다.<sup>2)</sup>

위의 『光明日報』 기사는 고구려가 중국 동북지방에 자리 잡았던 邊疆民族政權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邊疆’과 ‘民族’의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인 ‘변강’은 현대 중국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가간의 경계(國界)에 가까이 있는 지방” 혹은 “변경지(邊境之地)”·“국계 가까이 있는 영토”를 뜻한다.<sup>3)</sup> 즉 고구려는 변경지대이긴 하지만 분명히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였던 국가였다는 것이다.

2) ‘試論高句麗歷史研究的幾個問題’, 『光明日報』 2003년 6월 24일자 기사; 송기호a, 「중국의 한국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 65, 2003년 겨울호, 170~171쪽 재인용.

3) 변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윤휘탁,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 2003년 겨울호, 187쪽.

그러면 ‘변강민족’이란 무얼 뜻할까. 여기에서 ‘민족’이란 우리가 韓民族·漢族 등에서 사용하는 민족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현대 중국은 중국의 역사를 漢·唐·宋·元·明·淸王朝 등 여러 왕조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들 전근대의 중국은 언제나 漢族과 기타 여러 少數民族으로 구성된 多民族國家였다<sup>4)</sup>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민족이란 중국의 한족과 혈연적·문화적·역사적으로 다른 집단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고구려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韓民族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의 정리를 놓고 볼 때 『光明日報』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고구려는 중국의 영역 내(변경시대)에서 소수민족이 세운 地方政權이라는 것이다.

위 기사를 작성한 이<sup>5)</sup>는, 고구려를 한국사의 범주로서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달리,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국 영토 안에서의 고구려 건국과 중국 郡縣과의 관계, 역대 중국왕조들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 冊封과 朝貢의 정치적 관계, 고구려 遺民의 唐王朝에 대한 태도, 대다수 고구려인의 漢族化 등이 그 근거의 주 내용이었다.

먼저 고구려는 고구려 사람들의 활동지역으로 보아 중국사에 속한다고 한다. 고구려인들의 先祖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나, 고구려가 수도로 삼았던 곳들(현재의 桓仁, 集安, 平壤)은 모두 중국의 영토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자로서 이름이 잘 알려진 孫進己의 말을 빌면 중국학자들 간에도 고구려인의 族原에 대한 입장은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중<sup>6)</sup>인 사안이다. 그런데

4) 김한규, 「‘단일민족’의 역사와 ‘다민족’의 역사 -한·중 양국 교과서의 역사 서술과 이해-」, 『당대비평』 2002년 특별호, 99쪽.

5) 기사를 작성한 이는 ‘邊叢’이라고 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연구자는 없고, ‘변강의 민중’이란 뜻으로 보아 필명 또는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송기호a, 앞의 글, 170쪽).

6) 孫進己, 「中國 高句麗史 研究의 開放과 繁榮의 6年」, 『2004년도 고구려사 국제학술 심포지

흥미로운 것은 족원으로 거론되는 종족은 여럿<sup>7)</sup>이지만, 결론은 한결같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있던 소수민족이라고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정해진 틀 안에서 꿰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영역도 문제가 된다. 고구려의 영역은 대체로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에 걸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거 고구려의 영역을 현재 중국과 북한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측에서도 온전한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고구려는 427년 平壤으로 수도를 옮겨 멸망할 때까지 2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평양이 현재의 중국 영토 밖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더라도 '평양 천도 이전까지의 고구려'에 그쳤던 것이 종전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평양을 과거 漢나라가 樂浪郡 등의 군현으로서 통치한 적이 있었음을 들어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가 한반도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갔지만, 그 곳은 과거 한나라의 통치를 받던 곳으로 중국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隋·唐왕조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통합하려 한 이유도 정당하였다고 해석된다. 수·당의 고구려 공격은 중앙정권이 본래의 통치영역을 되찾기 위해 벌인 통일전쟁이라는 것이다. 위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은 중국 郡縣 故地의 回復이라는 정당한 명분<sup>8)</sup> 속에서 수·당이 고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당연

엄-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중국의 고구려사왜곡 공동대책위원회 편), 2004. 3, 54쪽.

- 7) 고구려 건국세력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夫餘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기원을 더 소급하여 肅慎·商人·炎黃·高夷·高陽氏에서 기원하였다는 설과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夷의 한 지류인 貊人·土着族·貊族과 夷族 그리고 漢族의 3계통에서 기원하였다는 설들이 다양하게 주장되었다(孫進己, 앞의 글, 54쪽).
- 8) 607년 순행에 나선 隋 煬帝는 突厥의 수장 啓民可汗을 방문하였다가, 마침 와있던 고구려 사신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때 수 양제의 측근 裴矩는 고구려 땅이 중국의 故土라고 전제한 뒤, 고구려를 굴복시켜 옛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한 결과였다. 수·당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내걸었던 침략의 명분이 현재에 와서 고구려사의 중국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와 중원왕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朝貢을 하고 冊封을 받은 것을 근거로 두 나라가 君臣關係에 서 있었고, 고구려는 스스로 이러한 宗主와 服屬의 차등적 관계를 끊으려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漢四郡의 郡縣的 통치로써, 고구려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군현이 사라진 뒤에는 조공·책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종일관 고구려는 중국 중원왕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중국사의 일부였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의 멸망기에 보이는 遺民들의 동향 역시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임이 분명한 근거가 된다. 고구려가 당에 통합된 뒤에 그 주체집단과 대다수의 고구려인들은 漢族에 융합되었고, 신라 등에 흘러 들어가 한민족의 구성원이 된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즉 고구려 멸망 후 절대 다수의 고구려인들이 중화민족의 일부로 융합되었다는 것은 고구려사의 귀속이 중국쪽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고구려와 후대 왕조들 간의 계승성을 부인하여 한국사의 일부로서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구려의 高氏 왕실은 고려의 王氏와 혈연적으로 아무런 계승관계가 없으며, 두 왕조 사이에는 25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어, 역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려조와 조선조에서 내세운 고구려 계승의 역사의식이란 ‘중국사’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었다.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는 오로지 중국 동북지방에 세워졌던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던 점에 있었으며, 그 역사적 계승성은 현대 중국에게만 승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물론, 종전까지의 조심스러웠던 입장<sup>9)</sup>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9) 중국은 漢族과 제 소수민족간의 ‘민족융합’을 강조하면서 여러 이민족들 - 匈奴人·鮮卑

게재한 신문이 중국 당국의 기관지<sup>10)</sup>였다는 점에서 반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학계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측 견해를 비판하였다.<sup>11)</sup>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고구려사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던 것이다.<sup>12)</sup> 하지만 최근 중국학

人·突厥人·吐蕃人·靺鞨人·契丹人·蒙古人·滿洲人-의 역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기술해 왔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현실과 그 현실을 극복하여 단일민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중국사의 공간적 범주로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기술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고구려가 현재 한국과 중국의 영토에 걸쳐서 존립하였던 국가(발해는 현재 중국의 영토 위에 존립한 국가로서 제외)였기에 구체적인 기술을 회피하여 왔다. 중국은 고구려사 기술을 통해 발생할 지 모를 (한국과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던 것(김한규, 앞의 글, 95~110쪽)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과 한국을 구분한다는 이 같은 원칙은,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서 독점하려는 최근의 시도로 보아, 이미 폐기되거나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기사가 게재된 『光明日報』는 주로 중국 지식인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학술·문화 기사를 주로 실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이며, 여기에 실린 '변중'의 글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中 당보 "고구려사는 중국사" 신동아 9월호 시론 全文 게재』, 『동아일보』 2003년 8월 20일자).

11) 이와 관련하여서는 『韓國古代史研究』 33(특집: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실태와 대처 방안)(한국고대사학회 편, 2004, 3)에 수록된 다음의 글들이 도움을 준다.

최광식a,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법중, 「중국학계의 東北古民族 및 고조선 연구동향과 문제점」.

공석구,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천도 문제」.

박경철, 「중국학계의 고구려 對 수· 당 70년전쟁 인식의 비판적 검토」.

김현숙,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규철,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안병우,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

12)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현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余昊奎의 글을 보라(余昊奎,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현황」,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반박의 글들은 여럿이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글들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백산학회 편,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국내성 천도 2000주년』, 2003. 11.

한국고대사학회 편, 『중국 고구려사 왜곡대책 학술발표』, 2003. 12.

고구려연구회 편, 『고구려=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2003.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03.

계의 고구려 관련 연구물 중에는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sup>13)</sup> 중국은 서술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거나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의 비판과 반론이 얼마나 중국측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그런데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정작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고, 심각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중국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우리와 입장을 달리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의 왜곡 문제를 돌려놓고 볼 때, 역사 연구에서 견해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삼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란 연구자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논의의 접점을 찾아 서로의 이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태고 과한 면을 덜어냄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올바른 이해에 좀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고구려사는 한국의 역사와 무관하며 전적으로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시각이 대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사를 중국과 한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一史兩用”)<sup>14)</sup>도 있지만 중국이 우위에 선 양국의 고구려 分占을 말

최광식b,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지식총서 56, 2004.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공동대책위원회 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4.

고구려연구회 편, 『제10회 국제학술대회-高句麗의 正體性-』, 2004. 6.

신형식, 『中國의 ‘東北工程’의 虛實: 실상과 그 허구성』, 『白山學報』 67; 改題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상과 그 허구성』,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2004.

이인철,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한국의 대응전략』, 『白山學報』 67;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2004.

금경숙, 『독자적인 고구려문화』,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2004.

13) 余昊奎,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현황』,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63쪽.

14) 이러한 관점이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수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지만, ‘일사양용’의 관점이 아직 유지되는 것은 고구려사를 완벽한 중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朴宣洙, 『정체성(Identity) 게임 시대의 중국과의 역사전쟁-동북 프로젝트를 통해 본 ‘동북’의 의미-』, 『歷史學報』 182, 314쪽). 한편 최근에는

하는 것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보는 점에서는 앞서의 시각과 입장을 함께 한다. 한편 고구려를 한국사의 범주로 간주한 시각은 과거의 오류로 무시되거나 종전의 입장을 버리고 대세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학계가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보는 단 하나의 시각 안에 모든 논의를 가둬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닐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하나의 지침 즉, 고구려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때 『光明日報』가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해도 이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지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 학계가 자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있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를 낮추어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현실을 올바르게 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국은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 꽤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왔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고서야 분명해진 것이지만, 사실 중국학계가 동북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은 1980년대였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지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東北古史資料總編』(3권, 遼瀋書社)<sup>15)</sup> · 『東北歷史地理』(2권, 黑龍江人民出版社)<sup>16)</sup> 등은 그 대표적

‘일사양용’의 뜻도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데, 한 역사를 두 나라가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고구려사의 절반은 한국사라고 인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란 것이다(서길수, 「중국 동북공정의 최신 성과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 2004. 3, 150~151쪽).

15) 遼寧省古籍整理總編室과 遼寧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주관으로,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孫進己·艾生武·孫海·孫泓 등이 저술하였다.

저작에 속한다. 중국은 동북지방의 역사 연구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사료와 지리고증의 자료를 축적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도 키울 수 있었다. 중국학계는 이처럼 기초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서 그 토대 위에 동북지방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고, 제시된 논리들을 다듬고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을 전면적이며 본격적으로 앞세우기에 이르렀다. 현재와 같은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경향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체계 속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중국 내에서 고구려사를 외국의 역사로 보려는 입장은 설 자리를 잃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그동안 중국 학계가 골고루 여겨왔던 문제, 특히 고구려의 영역이 현재의 북한(한국)과 중국 영토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 대해 더이상 회피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즉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북한(한국)과 중국을 구분하고, 분쟁의 소지를 피하려고 했던 종래의 원칙을 대신하여 적극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입장이 중국의 대한국관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새로운 입장을 통해 중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3. 新中華主義와 高句麗史

중국은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

16) 孫進己·王綿厚의 공저로 1989년에 발간되었다.

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부의 역사적 사실을 들고, 사실에 대한 해석도 중국 중심의 일방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중국의 주장이 합리적 인식과 역사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강변은 우리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새로운 역사상을 만들려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이를 알아보는데 아래의 글이 도움을 준다. 중국이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에 나서며 내세운 취지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 이래로 그 정치·경제적 지위가 날로 상승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뜨거운 지역이 되었으니, 아국(중국; 필자 주) 동북의 변강지구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극히 중요한 전략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세 아래 일부 국가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역사관계 등의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소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리하여 東北邊疆의 역사와 현상 연구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아울러 이 방면의 학술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분야 건설 및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동북변강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의 허가를 받아 中國社會科學院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속 연구공정”이라는 대형 학술과제를 조직하여 2002년 2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공정은 5년을 기한으로 하며 학과와 지역 및 분야를 뛰어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연구의 취지는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 연구를 학술적 궤도에 올려놓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있다. 동시에, 국제적 도전에 응하여 준비를 하고, 비교적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성취하는데 있다. …… “동북공정”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연구성과를 총정리하고, 우수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상 의문시되어온 문제, 현재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 이론상의 난점을 보이는 문제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연구 수준

을 크게 제고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계열화되고 권위있는 연구성과를 형성하는 것이다. …… 이 가운데 중요한 연구내용은 고대 중국 疆域 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古朝鮮·高句麗·渤海史 연구, 中朝關係史 연구·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遠東지구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강사회 안정전략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동북변강 안정에 대한 영향 연구 등이다. …… 이번 공정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長治久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강안정의 대목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sup>17)</sup>

위의 취지문은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sup>18)</sup> 이하 ‘동북공정’으로 약칭)의 추진배경과 연구내용, 지침 등을 전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공작’으로 잘 알려진 ‘동북공정’<sup>19)</sup>은 2002년 2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이 연구과제는 종래 중국의 변강지역 연구나 활동이 주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하 ‘변강중심’으로 줄임)’에 의해 수행되던 전례와 달랐다.<sup>20)</sup> ‘동북공정’에는 ‘변강중심’을 비롯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조직들이 망라되었고, 동북 3성의 지방정부조직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을 비롯하여 국무원 재정부장 등 중앙의 고위급 관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에 기울이고 있는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5년간의 연구사업 기간 중 사용

17) 동북공정의 취지문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다(최광식b, 앞의 책). 이 책에는 취지문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18) 동북변강의 역사와 그것으로 파생된 현재의 현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과 고구려사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윤휘탁의 글에 자세히 다(윤휘탁, 앞의 글, 190~200쪽).

19) 낯선 ‘工程’이란 용어는 대략 ‘역사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종합하는 일’로 풀이된다(朴直泮a, 앞의 글, 298~299쪽).

20) 윤휘탁, 앞의 글, 192쪽.

될 예산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3조원에 달할 것<sup>21)</sup>이라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의 연구사업을 기획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중앙과 동북 3성의 관련 기관이 망라되어 있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위의 취지문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기획 의도는 국가의 ‘長治久安’에 있다고 한다. 장치구안, 즉 중국의 항구적 안녕을 위한 장기적 정책이 ‘동북공정’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을 통해) 경향을 예측하여 각급 지도부서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치있는 학술자문을 제공할 것<sup>22)</sup>이라는 ‘동북공정’의 활용부문을 언급한 곳에서 드러난다. 이로 보아 중국 당국은 동북지방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학술자문을 ‘동북공정’에 기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달리 말하면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연구를 비롯해서 ‘동북공정’의 연구사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앞으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취지문은 ‘동북공정’이 “국가통일·민족단결·변강안정의 목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중국 연구자들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정해진 목표로 보아 이 연구과제는 ‘중화민족의 민족주의’와 그에 따른 역사관에 따라 수행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이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통한 체제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스스로 한족과 더불어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융합되어 함께 ‘중국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sup>23)</sup>는 점에서 그러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漢族을 비롯하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

21) 『중앙일보』 2003년 7월 14일자 기사.

22) ‘중국변장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http://www.chinaborderland.com>) 중 ‘동북공정’의 “동북공정간개(東北工程簡介)” 내용의 일부.

23) 김한규, 앞의 글, 95~101쪽.

족 국가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동화<sup>24)</sup>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관계가 중국의 국가적 안정에 직결되는 ‘잠재적 위협요소’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제창하고 이를 헌법 서언에 명기하여 제민족의 단결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역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바라고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이 얼마나 위협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동북 3성 지역의 혼란 가능성, 특히 朝鮮族 사회의 동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케위의 시각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主體史觀을 내세운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가 고대 중국과의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는 점,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보인 고구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일부 국수주의 학자들이나 단체들이 보인 이른바 ‘만주수복’에 대한 열망 등이 그러한 실례로서 거론되곤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중국 당국자에게 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만주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이란 정서가 우리들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려를 건국한 太祖 王建이 北進政策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 고구려의 옛 땅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계승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듯이, 이후의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관심과 계승의식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란 그야말로 고대 한국사에 대한 향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라는 과거의 국가는 현재에 부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쉬움이기 때문이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와 그 영광에 제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해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의 현실에 복원해 낼 수 있다고 여기는

24) 송기호a, 앞의 글, 176~177쪽.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그것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중국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과거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해 막연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 셈이 된다. 이 점에서 ‘고구려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문제삼는 중국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修交國 간의 정리에도 합당한 자세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하여, 의도한 바를 얻어낸 바 있었다. 중국 당국의 항의와 압력에 의해 티벳망명정부 수반인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만주수복’을 위한 열망이 실제로 있고, 그것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 중국은 결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대응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 중국이 일부 한국인 관광객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고구려사 귀속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중국측이 ‘동북공정’의 의도를 애써 감추고 있음은 중국 외교당국의 행동들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외교부장 왕리는 지난 4월 한중 양국 회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중국 정부와는 별개의 학문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sup>25)</sup> 그러나 4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sup>26)</sup>는 고대 한국사를 언급한 부분에서 고구려를 삭제하여 게시하였다.<sup>27)</sup> 이로써 고구려가 고대

25)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 왕이(王毅)가 내한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당국자와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차원의 공동 학술연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26)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www.fmprc.gov.cn).

27) 4월 20일 이진 한국 역사 설명부분은 “서기 1세기 이후 한반도 일대에는 신라·고구려·백제 등 정권형태와 소속관계가 다른 3개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었

중국사의 일부라고 강변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논지는 어느덧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 외교부장의 公言으로 우리의 대응이나 반발이 주춤해진 사이에 중국은 고구려사의 중국화 작업을 차근 차근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몇 가지 사안의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쪽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응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근현대의 한중관계사와 영토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은 시기적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불과하며,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남북통일 이후 불거져 나올지 모를 국경·영토분쟁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현재 국경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과 그 부당성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間島’ 문제를 쟁점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핵심이었다.<sup>28)</sup>

과거의 역사를 독점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현재의 필요성에서 기인하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간도 등 북방 국경문제에 대해 중국이 기민하게 움직이려 한다는 사실은 그 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관심을 반성케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위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비껴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중국이 기관지에 고구려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논리를 게재하고 ‘동북공정’을 통해 주요 논거들에 대한 글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구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선정된 여러 과제들 중에서도 중국학자들의 연구가

다. 이 중 ‘고구려’를 삭제하여, “한반도 일대에는 신라·백제 등 할거정권이 출현하였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28) 朴宣滄a, 앞의 글, 321~323쪽.

박선영b, 「미래를 노리는 중국, 과거에 집착하는 한국: 고구려연구재단으로 동북 프로젝트 대응 한계 있다?」,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2004, 346~359쪽.

윤호우, 「동북공정과 간도」, 앞의 책, 326~329쪽.

이와는 별도로 최근 9월 3일 여야 의원 59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간도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구려사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고구려의 귀속문제가 동북지역이 고대로부터 중국의 일부임을 주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또한 중국은 고구려사 관련 저술을 양산해 냄으로써 미흡한 논거와 박약한 논리라는 한계를 은폐하고, 동일 내용의 반복과 대량 유포를 통해 사실로써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우리가 그들의 시도를 목인한다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혹은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학문차원의 문제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을 가로막고, 논리의 허황함을 들추어내고 주장의 진위를 다투는 논쟁을 전개하여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역사왜곡이 하나의 사실과 역사인식으로써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최근까지 발해를 중국의 일부로 명기하면서도 고구려(고조선에 대해서도 그러함)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을 회피해 왔음<sup>30)</sup>을 알고 있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역사상 한국과 중국을 구분해 왔던 원칙에서 중국의 동북과 한반

29) 발해사의 귀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인 대응은 최근의 적극적 대응과는 상당히 달랐다 (임기환, 『동북아시아사에 대한 한중간 역사 인식의 차이-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심으로-』, 『제47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문, 2004, 17쪽). 발해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좁히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발해를 중국의 일부로 삼는 역사체계를 수립하면서 일단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고구려사에 대한 해석이 미진하고서는 중국이 그 같은 작업을 공고히 할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사는 중국이 발해를 중국사의 일부로 확정하는 데에도 필요하였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작업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도 고구려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0) 김한규, 앞의 글, 107~108쪽.

도 북부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주장하기에는 걸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중국사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현재의 국경 밖까지도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sup>31)</sup>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이 확정된다면<sup>32)</sup> 현재 북한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 일대까지 역사상 중국의 범주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고대 한국사의 범주는 한반도 중남부에 국한되고 마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任那日本府’설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sup>33)</sup>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고대 한국사의 영역이 한반도 중남부로 축소되면 이후 우리의 역사는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해진다. 統一新羅와 高麗의 영토가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언급한 중국학자의 글<sup>34)</sup>은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로서 확정된 이후의 한중관계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한국사의 범주를 한반도 중남부로 국한시키고 있는 중국의 인식으로 볼 때, 고려의 北方 개척과 조선의 北進 정책은 제 영토가 아닌 중국의 변방 일각을 차지하기 위한 침략행위로 간주될 것이고, 현재의 국경선을 마련한 성과 역시 중국 영토에 대한 고려와 조선의 일시적 점유가 오늘까지

31) 최근 고구려사 왜곡에 나선 중국측 주장에는 현재 중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는 별개로, 또 다른 역사범주와 귀속의 기준이 등장하고 있다.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한반도 서북부 지역도 본래 중국 군현지역이었다는 새로운 논지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만주지역의 역사만이 아닌 한반도 북부지역의 역사적 영역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기환의 글을 참조하라(임기환, 앞의 글, 21쪽).

32) 중국학계는 한군현과 한반도 북부 영역에 대한 역사적 점유를 매개로 고조선에 대해서도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후속 작업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임기환, 앞의 글, 21쪽).

33)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진출설을 사실로써 기재하였다가, ‘고구려’ 부분의 삭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복원 요구가 있자, 8월 5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만을 남기고 그 이전의 한국사 설명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34) 梁寶隆, 『고구려와 고려와의 관련 문제』, 『고구려사는 중국사인가』, 2004, 149쪽.

이어져 온 것으로 폄하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소재란 현 시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다.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한국사를 중국의 더부살이 역사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이해가 고대 한국사에 대한 역사·문화적 강탈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것이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세력 확대의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땅은 본래 孤竹國으로 周代에는 箕子를 封한 곳이고, 漢代에는 3개의 郡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晉 역시 遼東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臣으로 여기지 않고 外域으로 여기고 있는데 …… 어찌 그대로 두어 이 ‘衣冠의 땅’을 의연히 ‘蠻貊의 鄉’으로 둘 수가 있었습니까(『隋書』 卷 63, 裴矩傳).

서기 607년 隋 煬帝의 측근 裴矩는 고구려의 영토를 ‘蠻貊에게 빼앗긴 衣冠의 땅’, 즉 본래 중국의 영토인데 고구려에게 잃은 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땅은 역대 중국왕조를 계승한 수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구의 주장은 당대인들이 고구려 땅을 수복해야 할 故土로서 인식하는데 기여하였고, 고구려 침공이 정당하다는 명분을 수 양제와 唐 太宗에게 제공<sup>35)</sup>해 주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당으로 하여금 고구려 침공을 강행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역사인식이 그 뒤의 사태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sup>36)</sup>

35) 이와 관련하여 수 양제는 고구려 공격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고구려가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들어서 …… 오늘에 와서는 퍼지고 번식하여 수의 아름다운 강도를 엿보며 일부를 떼어내 오랑캐의 부류로 만들고 있음”(『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 23年 正月條)을 지적하였다. 또한 ‘요동(고구려 영토; 필자 주)이 옛날 중국 땅’이기에 고구려를 쳐야 한다는 당위성은 당 태종의 침공 詔書에서도 보인다(『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寶藏王 3年 10月條).

36) 나아가 이 주장을 전거로 삼아, 최근 중국학계는 수·당의 고구려 침공을 중국의 고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방면에서의 중국사 범주를 확대하고 그것을 역사 서술로써 확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族의 민족정체성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대비책일 수도 있고, 북한의 붕괴가 동북 3성의 안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중국에게 동북 3성의 안정을 저해할 외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남북한에 영향력을 부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活字化된 역사서술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장래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도 분명하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감을 제 분야에서 보이고 있다.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우위도 점점 더 확고해질 형편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동북공정’은 그것의 본래 의도가 朝鮮族의 中華民族化와 동북 3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거 수 양제와 당 태종에게 그러하였듯이 중국 중심의 일방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sup>37)</sup> 특히 불투명한 북한의 장래 등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시점에 중국이 중국사의 범주를 공간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당분간 역사분쟁의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지만, 이미 한편에서는 활자화된 역사서술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로서의 우리 학계가 나서서 그것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만

영토를 회복하여 전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전쟁(劉子敏, 『중화천하질서 하의 고구려』, 『고구려사는 중국사인가』, 58~60쪽 및 李治亭, 『수·당의 고구려 정벌』, 앞의 책, 113~114쪽)으로 파악하고 있다.

37) 앞에서 살펴보았던 취지문에서 동북공정은 “중국의 항구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치있는 학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은 없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학계의 논리적 근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한국사의 입장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수세적인 차원의 대응에 머물기보다는, 고대 동아시아세계 전체의 역사상 속에서 중원 왕조와 고구려의 관계를 구명하여 보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중국사가 가진 한계를 중국학계에 되돌리고 중국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역사상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되물어 봄으로써, 저들 스스로 신중화주의적 역사관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정적인 반발심을 앞세워 중국과의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움직임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맞물려 자칫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4. 맺 음 말—高句麗와 中原王朝間의 관계

지난 7월부터 고구려사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7월 1일 북한과 중국이 나란히 신청한 고구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신청을 유네스코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구려사를 북한(한국)과 중국이 半分하고 있다는 현실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 중국은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분임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그리고 귀족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고구려 전반기의 수도(졸본과 국내성) 유적 전체를 등재한 것에 비해, 북한의 등재는 평양의 東

明王陵 및 주변의 고분을 묶은 63개의 고구려 고분군이였다. 그러므로 문외한이 보면 마치 고구려사의 주류가 중국에 남아 있는 듯이 오해할 소지가 남게 되었다.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문화유산이 어렵사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외교부 부부장 왕이 명의로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부와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차원의 학술연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민간주도의 공동 연구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 역사항목에서는 고구려를 삭제하여 고대 한국사가 백제와 신라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음 날에는 『人民日報』와 <新化通信>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였다”고 소개하고, 6월에 발간된 『中國國家地理』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임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sup>38)</sup>하는 등,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 움직임이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뒤늦게 발견한 우리 당국이 중국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지만, 중국의 조치는 8월 5일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 역사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사실을 모두 삭제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 해도,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인식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개월간의 움직임으로 보아 중국 당국은 시간을 끌면서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이중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sup>39)</sup>이다.

38) 오마이뉴스, 2004년 6월 11일자.

39) 이 글의 초고가 연구소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월 중순 무렵이었다. 그 뒤 한달 여의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파견한 특사가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그 결과 “고구려사 문제에 중국 당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다는 것”과 “양국 학자들이 학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혹자는 이 글의 내용 일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겉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고구려사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역사 분쟁은 원만하게 타결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 당국이 앞으로 더욱 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송기호, 「중국의 약속 믿을 만한가」, 『중앙일보』, 2004년 8월 26일자 기사)이 보다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최근의 사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어떤 식의 접근방식으로든 고구려를 둘러싼 韓中 간의 역사분쟁이 쉽게 결말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이 있겠지만, 논의의 장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중국 당국과 학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특히 중국의 주장이 억지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의 형태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고구려사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오늘날의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북부에 걸쳐 존재한 다수의 종족과 정치체를 통합한 국가였다. 지리적으로나 국가 구성원으로 볼 때 중원왕조와 함께 고대 동아시아세계를 구성한 주요 인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건국 이래 고구려는 서쪽으로부터 세력을 신장해 오는 중원왕조와 다양한 내용의 관계를 맺어왔다. 전쟁을 비롯하여 외교적인 갈등, 문화·경제적 교류 혹은 허구적인 郡縣的 지배에 이르기까지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관계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 점에서 漢 이래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朝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시대의 중원왕조와 고구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각각의 역사적 사실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서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통치력이 미치는 공간으로서의 內地에 포함되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시대 중원왕조가 중심이 된 국제질서는 冊封과 朝貢의 독특한 제도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도 중원왕조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아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전통적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다. 특히 몇몇 시기에 있었던 전쟁기간을 제외한다면 고구려나 중원왕조 모두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여, 왕조가 바뀌더라도 책봉조공관계는 커다란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책봉조공관계에 대한

이해는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학계도 이 점에 주목하여 책봉조공관계를 내세워 고구려와 중원왕조 간의 관계를 국내 통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중국 당국과 학계는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활동했던 모든 역사의 주역들을 중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中國의 世界秩序(Chinese World Order)'에 대한 무지의 소치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역사적인 기준에 의해 전통적 동아시아세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왜곡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구려와 중원왕조 사이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의 여러 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는 책봉조공관계의 형식과 실제의 내용을 구별함으로써 보다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서술도 좀더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다. 책봉조공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적인 교류만을 강조하거나 대등한 외교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책봉조공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고구려가 중원왕조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정치적 관계에서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 애써 가려져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구려가 중원왕조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누렸던 독보적 지위는 물론이고,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 것이다. 혹은 우리의 고구려사 연구조차 자국사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폄하될 소지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고구려에 대한 연구시각도 한 차원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편타당한 이해야말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일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사 연구의 시각을 고대 동아시아사의 차원으로 넓혀 동아시아세계 속에서 고구려가 차지한 역사적 위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래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한 나머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고구려 대외 관계의 연관성을 소홀히 다룬 경향<sup>40)</sup>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와 개별을 동시에 보려는 자세 속에서 당시 중원왕조 중심의 국제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해야만 독특한 고구려의 역사적 위치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4,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동북공정, 고구려, 중국사, 역사왜곡, 역사인식

K C I

---

40) 余昊奎, 앞의 글, 63쪽.

<ABSTRACT>

The North East Asia Study Project of China(東北工程)  
and its Distortion of the History of the  
*Goguryeo* Dynasty(高句麗)

Lee, Seong-j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acute situations triggered by the Distortion of History of the *Goguryeo* Dynasty by China. Instead of simply surveying nowadays scholarly discourses are revolving around it, however, the main goal of this is to propose our response to it. Compared to the past historical perception, on the basis of which China had understood her national history on the ground of the present territory, its current perception is to expand the scope of Chinese History. In accordance with this, I shifted historical perception, China claims that the History of the *Goguryeo* Dynasty should be part of their own Chinese History. Studies of the *Goguryeo* Dynasty History in China are now pursued under the massive research projects guided by political purpose. In those regards, the results gained from those may serve as theoretical frameworks for designing the Future Chinese Policies in the East Asia. In addition, in spite of the recent compromise between China and Korea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Goguryeo* Dynasty, the historical dispute on the *Goguryeo* Dynasty between two nations is not completely resolved yet. Moreover, it is clear that China will continue the research on the *Goguryeo* Dynasty according to her political

intention.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should upgrade our level of research on the *Goguryeo* Dynasty.

Key Words : North East Asia Study Project, *Goguryeo* Dynasty, Chinese History, Distortion of the History, Historical Perception

K C I